

민주당, 다시 장외로… ‘김건희 여사 의혹’ 정조준

의원 전원 장외투쟁 선포 “장기전”
내달 2일 서울서 범국민 규탄대회
특검 수용 압박·탄핵 여론전 진행
여당 “촛불로 이재명 못지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3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에 대한 추진력을 얻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도 띄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국감이 끝나는 11월2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계기로 현 정권의 실정과 김 여사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국회박 투쟁은 지난 6월 서울역 앞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 이후 4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장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쟁을 선포했다.

의원들은 “통폐당을 준비하겠다”며 ‘장기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여러 차례 발의하고 정치가 상실했 시대에 살고 있는 와중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을 발의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장외투쟁이라 생각하고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대가능성은 늘 열려있고, 그런 소통은 하고 있다”며 “11월2일 말고, 그 다음 주(11월9일)에 시민사회 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이 합류할지 개별의원들이 합류할지는 실무 단계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1월 9일에는 양대 노총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당의 장외투쟁 방침은 이재명 대표가 공개 경고를 날린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결론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선고”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갯간을 텅텅 났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국민은 전

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며 “(정권 반대 집회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로 한 데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비판 여론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환기하면서 여당의 단일대오를 흔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촛불로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없다. 국론 분열시키는 촛불 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 “민주당이 다시금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어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동에 동조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 모든 비정상의 시작이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출발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두려움에 광장 정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명한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촛불을 들면, 국민은 횃불을 들고 민주당의 헌정 파괴와 사법 방해 시도를 막아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법사위 등 9개 상임위 국감… ‘김건희 블랙홀’

강혜경씨 오늘 증인 채택 ‘긴장감’
민주 “의혹 30건 넘어…끝장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남은 국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국감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가 충돌할 격전지는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 선거 공천’(2022년 6월),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2024년 2월)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종합감사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적절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진행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격전지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유 의혹 실제 등을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하도록 했다고 MBC와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방통위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와 관련해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 다”며 “여사님 관련 증인은 죄다 줄행랑이고, 정부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넘어 국정 혼탁의 공범”이라며 “남은 기간에도 진실의 끝장까지 밝히는 국감의 자세로 온 힘을 다하겠다. 감추고, 덮고 도망치는 이들을 예외 없이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윤석열·한동훈, 오늘 회동… 여권 “빈손은 안된다”

차담 형식…정진석 비서실장 배석
핵심현안 등 일부 성과 낼지 주목
김건희 여사 문제 인식차는 여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회동하기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권 내에선 이번 회동이 ‘빈손’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김 여사 의혹 등에 대해 두 사람의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21일 오후 차담 형식으로 만날 예정이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구하고 거절당한 지 약 한 달만이다.

한 대표는 면담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 마련 △수평적 당정관계 및 당정 소통 정례화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국 “끝이 아닌 시작”… 한동훈 “호남 포기 않겠다”

곡성·영광 찾아 낙선 인사

10·16 곡성·영광 재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곡성과 영광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박용두 전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곡성군 육과장을 찾아 “재선거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곡성군민들이 따뜻하게 격

려해주시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해서 선거에서 졌다”고 했다.

이어 “선거는 끝났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책과 법안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면서 향후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곡성군 석곡면 일대 유세차 순회 낙선 인사를 마친 뒤 영광군으로 이동해 군민들과 소통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8

법 마련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정관계 정상화’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엇갈린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민주당이 벌써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는 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차가 커서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게 지배적 전망이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을 두고 친한계(친한동훈)에선 불만 기류도 읽힌다.

한 친한계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을 꼭 배석시키겠다고 하니, 한 대표도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일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다.

한 대표는 곡성 5일시장을 찾아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와 시민들을 만나 “국민의 힘에서는 곡성에 출마해 용기있게 헌신할 만한 분이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곡성, 호남에 더 잘할 것이고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처음으로 왔다”며 “호남에서, 곡성에서 다음에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오지현 기자